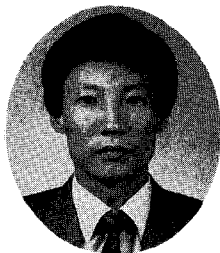


특별기고

경제계, ‘환경공격’ 언제 멈추나



이정윤
일간보사 환경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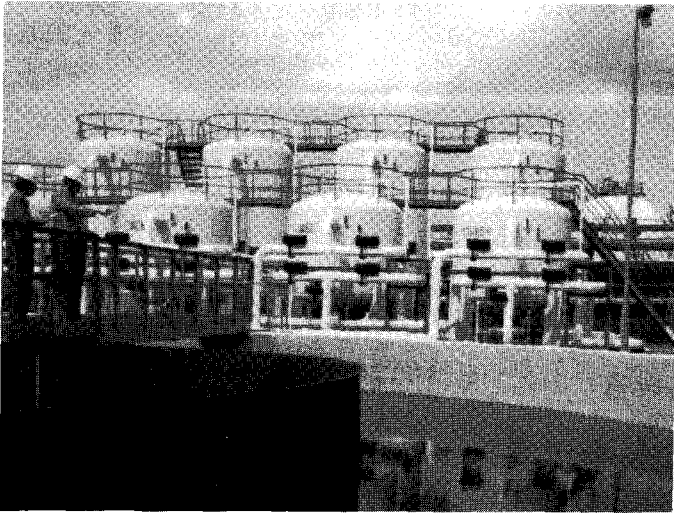
최 근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이 결정되고, 재작년 창설된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환경 연계」라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그 역류현상이 생겨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완화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27개 분야 가운데 안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격증 소지자들의 의무고용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의무고용 폐지 대상에 일선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환경관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환경관리인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생기기 마련인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과 같은



↑ 국가는 전 국민들, 나아가 후손들의 재산인 공기, 물과 같은 환경재를 몇푼의 돈(부과금)과 맞바꿨다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염물질을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전문가들이다.

날로 악화 추세인 국내 환경질을 보거나 국제적인 환경흐름으로 볼 때 이러한 환경관리인들의 기능이나 위상이 강화되고 제고되어야 함에도 실제 환경정책에서 반대현상이 발생하는 점은 이해도 안될 뿐더러 단견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번 조치가 돌출된 사안이 아니라 「경제와 환경은 동반자」, 「경제와 환경은 동전의 양면」,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의 「평등」 용어가 난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환경은 경제개발의 걸림돌」이라는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속셈이 드러난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논리는 그간 경제규제 완화조치 등 일련의 환경정책 후퇴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92년 낙동강 폐놀사건이후 여론에 힘입어 한동안 상승세를 타던 환경정책이 불황 등 국내 여건을 틈탄 경제계의 「다단계 용단폭격」을 받고 있는 셈인 것이다.

1차 폭격은 김영삼 정부 출범직후 추진된 경제규제 완화 조치로 배출시설허가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이 대폭 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통산부 등 경제부처가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환경부를 밀어붙여 사전 환경관리 차원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배출시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시키고 대형 사업장에 고용된 환경관리인의 수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점적허용의 길을 텃다.

그때 환경전문가들은 경제계의 2차 공격을 예상했었다.

다음인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을 완전히 폐지하고 상습공해업체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거기에 해당된다.

특히 이번 「경쟁력 높이기」를 내세운 2차 공격은 시화호 물오염, 여천공단 대기오염, 한탄강 물고기 폐죽음사건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각종 후속대책이 막 시행중인 상황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당국이 환경관리인의 기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데서 출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관리인의 기능은 곧잘 의사와 비교된다. 「좋은 의사」는 질병의 처방이나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 붙여진다.

얼핏 환경관리인은 폐수처리장이나 대기오염 처리시설에 도착한 오염물질만 처리하는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나 첨가물의 성분이나 양, 유독물질 유입여부, 오염물질 배출량, 날씨 등 생산공정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대책을 세울때만 「우수한 환경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당국도 일선 환경관리인들이 이같은 넓은 기능을 수행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가 작년부턴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제도가 좋은 사례다.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면 오염물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생산공정으로 바꾸고 오염에 기여도가 큰 원료나 첨가물은 제품의 질에 변화가 없는 한 그렇지 않은 물질로 전환하고 생산공정에서도 오염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정을 개선하면 각종 환경특혜를 주는 것이다.

환경관리 기능이 단순기능이 아님을 역설하는 말로 「환경시설을 부모가 자식 대하듯 한다」는 말이 있다.

환경오염처리시설로 주로 쓰이는 생물학적 처리공법의 주 기능을 하는 미생물이 못된 자식처럼 변덕이 죽끓듯하여 애지중지 하지 않으면 관리가 좀처럼 어렵다는 뜻을 견준 말이다.

미생물은 조금만 춥거나 더워져도 제 일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환경사고를 일으키는 등 관리인들의 애를 먹인다.

축약하면 환경관리가 처리시설에 가동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될 정도로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악조건속에서 국가 환경관리에 일조하는 관리인들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결국 국가 전체로 볼때 환경오염 물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관리인들의 권익단체인 전국환경관리인 연합회가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사고발생이나 긴급불안 등으로 현 지위에 대해 항상 불안을 갖고 있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환경관리인들은 「가능하다면」 관리인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 잠재심리를 이번 환경관리인 의무고용 폐지가 부추길 공산이 크다.

결국 우수한 환경관리인들이 현장을 등진다면 그 결과는 국가 오염총량을 늘리는 현상으로 나타날게 분명하다.

경제계의 「환경정책 무디기」 공략은 비단 환경관리인 사안에 멈추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 「4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조업정지」를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중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나 폐기물 발생 원인자에게 회수책임을 부여하는 예치금이나 부담금의 요율을 사실상 동결시킨 것도 이에 해당된다.

환경전문가들은 상습적인 공해업체에 대한 제재 완화는 「비싼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값싼 부과금을 부과하는 편이 낫다」는 일부 사업주들의 인식을 현실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는 전 국민들, 나아가 후손들의 재산인 공기, 물과 같은 환경재를 뿔뿔의 돈(부과금)과 맞바꿨다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치금과 부담금을 실제 처리비용에 맞춰 부과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거두려는 환경당국의 기대도 경제계의 저항에 좌초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현행 예치금이나 부담금이 실제 처리비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기업의 폐기물 회수처리 자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대략 두배 정도의 인상을 추진했으나 일부 품목의 생색내기 인상을 제외하고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일천하가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보호를 외칠때는 경제개발의 후유증으로 이미 우리 강산은 중중에 걸린 시점이었다.

외침의 연륜이 짧다는 점이 우리의 환경이 온존하다는 뜻은 될 수 없다.

차라리 정치 경제적으로 환경을 되돌아볼 수 없도록 한 구조가 우리의 환경을 한계적 상황까지 내몰았기 때문에 외침의 시점이 경교가 아니라 이미 절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환경관리인의 기능은 곧잘 의사와 비교된다. 「좋은 의사」는 질병의 처방이나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 붙여진다.

얼핏 환경관리인은 폐수처리장이나 대기오염처리시설에 도착한 오염물질만 처리하는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나 첨가물의 성분이나 양, 유독물질 유입여부, 오염물질 배출량, 날씨 등 생산공정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대책을 세울때만 「우수한 환경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쓰는 말로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가 좀처럼 어렵다고 한다.

또 회복한다하더라도 이미 오염시켜서 얻은 이익보다 수십 수백배의 댓가를 치른 후일 것이다.

환경부의 한 정책당국자의 말은 이런 현실과 우려를 적시하고 있어 걱정을 커지게 하고 있다.

『경제부처가 경제규제완화(1차 공격)에 이어 경쟁력 높이기(2차 공격)로 환경정책을 무디게 하는 데 성공하면 이제 대대적인 3차 공격이 실시될 것이다. 경제부처와 현안을 협의할 때마다 「환경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경제당국자들의 환경인식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환경시대에 경제계의 환경에 대한 공격이 언제 멈춰질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다. ◀